

종합·해설

민주 '통합방법-전당대회' 갈등

손 대표 등 주류측 "통합 목표로 전대 치르자"

박지원·박주선·김부겸 "당내 혁신이 먼저다"

10·26 재보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강력한 변화와 쇄신을 토대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보다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차기 전당대회 문제를 둘러싸고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의 임기가 오는 12월18일 종료됨에 따라 잠정적으로 12월11일을 전대 날짜로 잡아놓은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의 새 지도부 구성 논의는 야권 대통합 작업과 맞물리면서 전대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한마디로 통합에 방점을 두고 전대 문제를 볼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쇄신으로 대표되는 전대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손 대표를 비롯한 주류 측은 전대를 통합 전당대회 형태로 치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조만간 본격화 될 야권 대통합 논의의 성과를 토대로 통합을 추진하는 성격의 전대로 가자는 것이다. 통합의 결실을 정치적 성과와 계기로 삼겠다는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당장, 손학규 대표는 지난 29일 민주당 광주시장 주최로 열린 부동산 등반대회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며 "민주·진보 진영을 묶어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통합을 강조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지난 28일 SBS 라디오에 출연 "선거연합보다는 통합을 통해 후보단일화를 이루는 것이

더 강력하고 분명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통합의 파트너들이 민주당과의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대통합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려면 통합의 성사 여부를 떠나 연말까지는 당의 체제를 정비해야 하는데 통합 논의만 쳐다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의 전대를 먼저 개최한 뒤 통합의 성과를 보면서 통합전대를 준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통합을 추진하되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내년 총선 대비를 위해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통합전대가 성사된다고 해도 시기가 내년 1월로 넘어가면 민주당은 아무런 준비를 할 수 없고 이는

선거 패배의 길"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통합 전대가 이뤄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전대라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부겸 의원은 "선(先) 당내 혁신, 후(後) 야권통합이 필요하며 야권 통합작업이 내부의 문제를 덮거나 뒤로 미루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처절하고 치열한 내부 혁신과 쇄신 노력 보다는 전당대회 개최 등을 놓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참패 이후 치열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상징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런 식으로 간다면 범야권 통합도 국민적 감동을 모으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동목기자 tuim@kwangju.co.kr



박원순 서울시장(30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야권 대통합 추진기구 '혁신과통합' 상임대표단과 오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윤선 혁신과통합 상임대표, 이해찬 전 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 /연합뉴스

범야권 통합 주도권 확보 '물밑경쟁'

민주-시민세력 통합 기류 속 기싸움

10·26 재보선 이후 통합의 주도권을 놓고 범야권 정당 및 정파 간의 물밑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선,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 이후, 혁신과 통합은 범야권 통합의 매개 역할에서 주축 세력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가 사실상 야권대통합과 시민의 참여에 따른 승리로 분석되면서 그동안 통합의 전도사 역할을 했던 '통합과 혁신'의 정치적 비중이 커진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통합과 혁신의 핵심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범야권의 통합을 요구하는

의심이 확인됐다"며 "이제 통합을 외면하는 야권의 정치 세력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심경은 편치 않다. 당장, 통합의 주도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도부가 한 줌도 안 되는 장외 세력에 끌려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차기 당권주자인 박주선 최고위원이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커진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통합과 혁신의 핵심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범야권의 통합을 요구하는

당장, 통합과 혁신의 정치적 실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해찬, 문재인, 한명숙 등 일부 수뇌부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야권 통합을 놓고 양측 간의 기싸움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는 "혁신과 통합 측이 공동대표직과 최고위원 지분의 50%를 요구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 돌고 있다. 민주당 당직자는 "혁신과 통합 측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따로 따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흘리며 민주당을 흔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연동목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당권경쟁' 다시 불붙나

박지원·김부겸·이종걸·이인영·박주선·조배숙·박영선·한명숙 등 출마 거론

현 지도부 임기 만료...12월11일 전당대회 예정

야권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민주당에서는 당권 경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12월18일 임기가 만료되는 현 지도부를 대신할 새 지도부를 꾸리기 위해 일제감치 12월11일을 잠정 전당대회 일로 잡아뒀었다.

하지만, 10·26재보선과 다른 야당을 포함한 통합 전대를 치르자는 '야권 대통합론'이 제기되면서 일부 주자들을 제외하고 본격적인 득표 활동에 나서지 못했다.

전대 주자들은 야권 대통합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데다 전대일까지 한달 보름 남짓한 시간밖에 남지 않아 선거전 준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야권 통합 논의의 향배에 따라 전대 시기나 성격이 다소 유동적 이어서 아직 당 지도부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민주당만의 전대가 불가피하지 않겠는

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달 초 여 의도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했다. 가장 먼저 선거전에 뛰어든 박 전 원내대표는 '검증된 리더십, 정권교체의 최적임자'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김부겸·이종걸 의원도 당권도전 준비를 이미 마치고 대의원, 당원과의 접촉을 위한 전국 순회를 하는 등 조직기반 굳히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두 의원은 박 전 원내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새대교체, 전국정당'을 기치로 내걸 계획이다.

또 '486'의 대표격인 이인영, 구(舊) 민주계 출신의 박주선, 유일한 여성 지도부인 조배숙 최고위원도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은 '안철수 신드롬'과 서울시장 보선을 통해 '정당혁명'을 바라는 민심의 요구가 분출했다고 보고 자신이 책임자임을 내세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조직인 동북아위원회를 꾸린 박 최고위원은 '강한 리더십'과 '강한 민주당'으로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

다 시민사회 박원순 후보에게 석패한 박영선 정책위의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주변에서 강한 출마 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명숙 재판 오늘 1심 선고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기소 이후 무려 1년3개월 만인 31일 내려진 것이다.

이 사건은 애초 한만호(50) 한신건설 전 대표가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과 관련해 9억원을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나 재판 도중 한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판이 지난달까지 23차례나 이어지는 등 장기화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현재 재판장과 배석

판사들의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28일 "재판부에서 그동안 제시된 양측 증거와 현장검증 내용 등을 토대로 심증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면 한 전 총리의 정치적 행보에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무죄가 선고된 뇌물사건처럼 다시 무죄가 나온다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한나라 '당 쇄신'싸고 감론을박

"지도부 교체" "실질적 개혁" 충돌 양상

한나라당 내에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불거진 쇄신 방향을 놓고 감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지도부 교체론'과 '실질적 개혁추진론'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의원은 30일 트위터를 통해 "내년 농사를 잘 지으려면 객토(客土·지력을 높여려고 다른 지역에서 흙이나 모래를 옮겨오는 것)를 하든 땅을 바꾸든 해야 할 걸세. 나는 원래 농사꾼이었지~"라고 말했다.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관을 갈아엎는 과감한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원희룡 최고위원도 이날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선거 결

과는 전국적으로(환산하면) 100만 표 차이이다. 정권을 빼앗겼다는 이야기"라면서 "나를 포함해 지도부가 좀 합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지도부 교체보다는 실질적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우세한 상황이다. 이들은 공천개혁을 통한 인적개편을 얘기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당 쇄신을 주장해온 쇄신과 8명을 중심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혁신 8인방'에는 4인의 남경필 최고위원과 재선의 이해준 제1사부부총장,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초선의 구상찬·김성식·김세연·정태근·홍정욱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은 트위터를 통해 "(선거 패배)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마당에 지도부 교체가 능사가 아니라 이제는 무엇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말보단 실천을 위해 조용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새 인물 영입을 통한 인적개편론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을 대거 수혈해 내년 4월 총선에 나서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으나, '물밑'과 '맞닿아' 있어 당내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신청 접수

▶사업내용
태양전지를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을 SMP가격과 인증서 판매가격을 합산한 가격으로 전력거래소 및 RPS기관에 판매하는 발전 시스템

인증서 판매가격: 입찰을 통하여 결정

▶신청대상: 건물옥상 및 공장지붕,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를 소유한 자

▶수익성: 건설 투자비 회수는 약 8~9년, 수익은 건설비용의 약 2배 창출

▶건설기간: 신청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의 기간 소요(사업허가~준공까지)



태양광 주택
3kw기준 800만원으로 시공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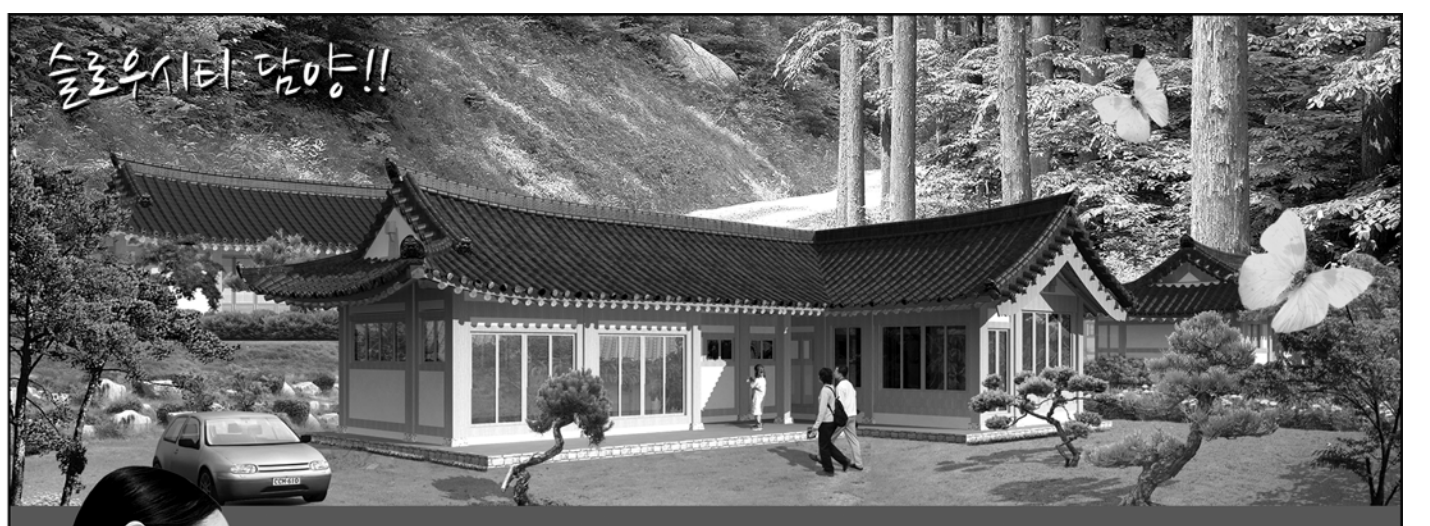
내집 전기는 내가 직접 만들어 쓴다!
누진세 해방 및 전기료 80% 절감효과

선착순 신청/접수

설치효과 월 평균 92,490 원 절감
설치전 월 평균 470kwh 사용으로 요금 105,110원
설치후 월 평균 140kwh 사용으로 요금 12,370원
설치장소: 주택, 상가, 마을회관, 공장 등

상담문의 062)268-5118 017-310-4119 010-9435-0441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친환경 기업 정우엔지니어링 www.jwsolar.co.kr



한옥(예정)마을 조합원 추가모집

금번 전남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일대에 한옥(예정)마을을 조성코자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향후 지정예정이며, 경질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면적 32.195㎡(구, 9.739형) 대지에 31세대 분양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고서-대덕간 도로확장공사 예정, 개통시 광주-대덕간 9분 소요
- 순천 및 서물방향 진출용이(형평 IC)
- 버스노선 518, 303번 운행 말미우시장 20분내 도착가능
- 조합원 기금비 200만원 납부
- 태양광 및 지열을 이용한 전력공급 시스템설치 (세대당 설치비 부담 있음)
- 제1금용권 3,000만원(연리 2%까지 대출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향후 한옥(예정)마을을 민박촌으로 지정 예정이며 창평 슬로시티 및 담양 인근 관광객 숙박유치 (메타세콰이아길, 죽녹원, 관방제일, 주사원, 식영정 등 주변 관광지 다수로 전원생활과 소득창출 가능)

조합원 가입문의 010-7210-6118 · 010-4205-2340 · 010-4025-6911 · 062-265-3125
현장위치: 전남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212번지 일원